

## 〈특별논단〉

# 일제하 조선(朝鮮)공업의 지리적 파행구조\*

형 기 주\*\*

### 머리말

한국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루고 NIEs 대열에 오르자 식민시대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것 같다. 일제의 침략과 수탈이 한국의 근대화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이른바 「침략-개발론」이 바로 그것이다.<sup>1)</sup> 우리의 근대화 문제를 추구하면서 한반도에 있어서 일제 식민경제의 성격을 「침략-저항론」이니 「침략-개발론」이니 하는 2분법으로 규정하는것도 이상하거나 일본의 식민지적 「수탈」과 「개발」 중에 어느쪽에 무게를 더 두었느냐를 따지는 것도 이상하다. 왜냐하면, 20세기의 식민지 착취는 그 수법이 매우 교활해서 으레히 개발을 앞세우는 것이 보편적인 양식이라 이를테면 16세기 에스파냐의 중·남미 약탈과는 그 양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발」이면 어떤 개발이고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에 있을 것이다.

필자는 역사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근대화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본론의 직접적인 과제로 삼으려함이 아니다. 이른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적 공업개발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투영되었으며, 후대에 어떠한 영향을 남기게 되었느냐를 과제로 삼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공간속에서 숨쉬고 살면서도 그 공간이 언제부터, 왜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직·간접으로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쉽다. 역사적 인식은 있으되 그것이 공간 속에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났는가를 거의 도외시한다는 뜻이다. “역사는 움직이는 지리”란말이 있듯이 역사적인 사건은 약간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 공간에 반영되어 생각보다는 오래도록 남아서 다음에 오는 역사에 영향을 미친다. 바꾸어 말하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수행한 파행적 경제활동은 공간적으로 남아서 광복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동안 우리의 공업입국을 저해하였다는 뜻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을 절약하는 뜻에서 한반도 지역격차의 시발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공업을 통해서 알아보고, 아울러 오늘날 호남의 공업 소외 요인을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일제강점기의 노동수탈의 실상을 논의한 다음, 1930년대 공업성장의 실상이 과연 무엇인지를 밝힐 것이다. 일본의 관방학자들이 이 시기를 우리의 산업혁명이라 이름한 바있고, 일부 국내학자 중에서도 이시기에 조선의 공업이 급속 성장하였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경성시내의 도시계획이나 민족간 거주지 분할이 공장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영세공장의 존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서술하면서 이 글을 맺을 것이다.

\* 본 논문은 역사문제연구소에서 간행되는 「역사비평」에 게재되었던 것을 일부 수정 가필한 것임.

\*\*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경제지리학)

### 1. 지역격차 발생의 시발

우리는 흔히 영·호남의 지역격차나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격차를 경제개발 이후의 후유증으로만 치부하기 쉽지만 이것은 이미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오랜 후유증을 알아야 한다. 산업구조나 공업구조, 그리고 이들의 지역구조란 한번 정착이 되면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 놓기가 그리 쉽지 않고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호남지방을 농업위주의 수탈지로 개발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은 호남지방으로 하여금 가혹할 정도의 공장 기피지역으로 만들었고 오늘날 까지도 농업 후진지역으로 묶어 놓은 결과와 같은 이치이다.

일제강점기 공산품생산액의 영호남 격차를 보면 호남을 100으로 볼 때 영남은 1930년 현재에 217, 1940년에는 180에 이른다. 과연, 이무렵 호남지방에는 종업원수 100인이 넘는 공장이래야 고작해서 전주와 광주의 생사·방직공장, 익산과 여주의 고무공장, 군산의 정미공장 5~6개에 불과 했다.

경성을 포함한 경기도를 지금의 수도권으로 볼 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또한 오늘의 그것에 못지 않았다. 경성을 포함하는 경기도의 공산품 생산액이 1940년 현재에도 이미 남한 전체의 약 38.4%를 점하고 있었고, 일제가 물러간 이후 10년이 지난 1955년의 실상을 보아도 한반도의 중심과 주변 구조는 오늘을 예

고하듯이 더욱 굳어만 가고 있었다. 그때의 실상은 미국의 원자재원조에 의한 귀속자산 위주의 산업활동이 있기에 일제가 남기고 간 흔적이 그대로 반영되기 쉽다. 당시는 워낙 경제의 규모가 작고 너나할 것 없이 모두가 가난하던 때라 지금처럼 지역격차가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뿐이다.

일부학자들은 일본이 만주 침략을 본격화한 1930년대에 한반도의 공업화가 급속히 촉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어떤 성격의 공업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정책의 구도는 값싼 노동력과 원료의 착취가 그 첫번째고, 대륙시장에의 접근과 군수공업의 확대가 그 둘째이기 때문이다. 우가끼(宇垣)총독의 “일본은 정공업(精工業), 조선은 조공업(粗工業)”이라 주장한 구상은 한반도를 개발·육성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크게는 일본제국주의 야욕을 충족하기 위한 일만지계획(日滿支計劃)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광복후 그들이 무너짐과 동시에 모든 경제활동의 기능은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다.

우선 1940년 현재 지하자원 생산에 있어서 남북을 비교하면, 철광과 무연탄은 거의 90% 이상이 북한에 집중하여 있었고 텅스텐과 흑연은 70% 이상이 역시 북한 생산이었다. 전력과 화학공업 및 금속 공업은 80% 이상이, 요업은 60% 이상이 북한 생산이었다. 이에 반해서 쌀과 보리 생산은 75% 이상이 남

표 1. 일제하 공산액의 영호남 격차

(단위 : 천엔)

연 도	영 남	호 남	호 남 대 영 남
1920	45,498	27,833	100 : 163
1930	66,744	30,811	100 : 217
1940	256,865	142,324	100 : 180

한 집중이고, 방직공업(84%)과 식품공업(64%)의 생산은 남한이 절대 우세하였다.<sup>2)</sup>

산업구조란 여러가지 산업의 상호존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마치 톱니바퀴처럼 한가지 기능이 상실되면 나머지 기능도 정지되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광복 직전과 직후를 비교할 때, 공장수가 무려 절반 이상이 줄었고 이에 연결된 광산은 96%, 운수업은 98%가 마비된 상태였음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sup>3)</sup>

격차발생의 징조는 적어도 1960년대 중반까지도 현저했으나 1955년 우리의 공업구조는 공장수에 있어서 무려 59%, 종업원수에 있어서 57%가 식품과 섬유공업에 치우쳐 있었고 1966년에도 각각 45%와 44%를 점하는 이른바 기형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원자재 원조에 의한 3백(섬유, 제당, 제분)공업이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기형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오랜 세월을 고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의 공간적 흔적은 아직까지도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는 터이다.

## 2. 호남지방 공업정체의 요인

호남지방에 대한 편견은 일제의 호남지방 차별개발 정책이 그 촉진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호남지방은 일제가 가장 탐내던 토지투기의 대상지이었던 반면에 공업개발을 게을리한 곳이요, 이들의 토지투기에 희생된 탈농민이 북부지방의 공업화에 값싼 노동력으로 유출된 곳이기 때문이다.

일제의 강점 초기(1915년)만 하더라도 호남지방의 공업생산액은 전북이 한반도 전체의 5.8%, 전남이 7.8%를 점하고 있었으나 1940년에 와서는 전북이 2.8%, 전남이 4.9%로 상대적인 축소를 면치 못하게

된다. 기실, 호남지방에 입지했던 공장으로 괄목되는 것을 든다면 일본면화(日本棉花)계열의 목포공장과 익산공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면화의 재배·조면업이 주업이라 호남지방 일대의 옥지면 재배와 그 대일 반출이 주임무였고, 전주에 입지한 가타쿠라(片倉)계열의 제사공장과 광주에 입지한 일본면화 계열의 도제(道是) 제사공장 역시 호남일대의 누에고치 수매와 대일 생산반출이 주임무이었다. 이밖에 종방(鐘紡)계열의 광주 방직공장, 군산의 조선정미공장, 영산포에 입지했던 동척계열의 정미공장 등 모두가 원료의 대일반출을 위한 반가공 공장의 건설이었다. 이것을 두고 한반도 공업화를 위한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야말로 공업건설이 아니라 작업장 건설에 불과하다. 저들은 값싼 원료를 수탈하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1차가공을 거쳐서 일본에 들여갔으니 여기에서 어떻게 공업의 전후방 연계효과를 바랄 수 있었을까? 그러면 왜 호남지방에는 이지방 농산물 수탈과 연관되는 작업장 이외는 공업건설이 소외되었던가?

흔히 사람들은 공장건설에 입지조건을 거론한다. 공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연료나 원료에의 접근, 항만 조건, 용수조건, 노동 및 시장조건 등에 민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공업이 되었건 간에 최적입지(最適立地)란 있을수 없고, 일정 범위의 입지 가능지역에 포함된다면 구체적인 장소(site)선정의 문제는 당국이나 공장 주체자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 가령, 울산의 정유공장과 여천의 정유공장을 놓고 어느쪽이 최적입지라고 판정할 수 없을 것이며 어느쪽이 되었건 간에 이들은 입지가능 범위에 속한다. 왜 여기에 결정되었느냐 하는 것은 당시의 의사결정자와 의사결정환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여천에 정유공장이 결정된 과정은 1970년 전후 '호남 푸대접론'과 대통령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호남지방이 입지조건이 불리하여 공장건설이 기피되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공장의 입지란 장소의 선정보다도 선정된 후에 이른바 선발이익(先發利益)이 누적되어 유리한 조건으로 관성화(慣性化)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제가 호남지방을 공장건설에서 도외시한 것 역시 입지조건 불리 때문이 아니고 식민지착취의 다른 속셈 때문인데 그것이 바로 토지투기의 막대한 이익이다. 호남지방은 한반도 내에서 농업 및 토지투자의 이율(8.0~8.5%)이 1937년 당시 식산은행 대부율(6.5%)이나 주식투자의 이율(6.4%)보다 한결 높았기 때문에 동양척식회사를 비롯하여 토지투자를 위한 일본인 대지주가 쇄도하던 곳이다. 따라서 타지방에 비해서 이곳은 소작지의 비율이 총 논·밭 면적의 77%에 이르렀고 소작료 또한 고율 정조법(定租法)이 우위를 점할 뿐 아니라 소작인에 대한 각종 조세공과금의 부과, 소작계약의 보증금이나 소작료 전납제 등 부당한 소작관계 때문에 소작권쟁의가 빈번했던 곳이다.<sup>4)</sup> 따라서 고리대금에 의해 논·밭을 빼앗기고 탈농하는 농민이 어느지방 보다도 많았던 곳이 바로 호남지방이다. 이에 반해서 농지가격의 상승률은 일본은 물론이러니와 한반도내에서도 가장 높은 곳이니 토지투기에 재미를 본 일본인들이 이곳에 공장을 세울 까닭이 없었다. 여기에서 탈농된 농민들은 화전민으로, 또는 북부지방과 만주의 광산 및 공장 노동자로 유출되고 호남지방은 그 관성 때문에 광복 이후에도 계속 농업후진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 3. 노동수탈의 실상

어떤 학자가 일제하 조선의 농업정책을 가리켜 “농민을 살리지도 죽이지도 않는 정책”이라고 비유한 일

이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의 도시근로자 역시 목숨이 붙어있기에 살아난 것이지 지금의 60대 이상의 웬만한 노인치고 콩보리밥이나 초근목피로 연명치 않은 사람은 드물다. 그러고도 일제가 동원한 강제노동에 응해야 했다. 과연 초근목피의 채취가 국민총생산(GDP)에 계산되는지는 몰라도 정태현교수의 일제하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발표된 것 처럼 식민통치기간에 국민총생산의 80%가 고스란히 일제에 유출되었다면 일제의 착취가 얼마나 가혹했는가 짐작이 갈 것이다.

일제는 광산과 공장의 노동력을 거의 조선인으로 충당했다. 1936년 현재의 표본조사에 의하면 공장노동자 6만 5천명중 86%가 조선사람이었다. 이에 반해서 기술자와 사무직은 거의 일본사람이었으니 특히 1944년의 실상으로 보면 공업기술자 중 80%가 일본사람이요, 이 중에도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은 거의 90%가 일본사람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광공업 노동자수는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군수자원의 약탈적 개발과 군수공업의 대규모 이식에 따라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공장노동자수의 85% 이상이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의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며, 노동자수의 35%는 연간 단 하루의 소정 공휴일도 없이 일을 해야할 처지였다.<sup>5)</sup>

일본의 전시체제가 강화되면서 급증한 노동수요를 충당키 위해 「노동자징용제」가 강행되었고 심지어 초등학생들 까지 「근로동원」에 충당되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혹사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직공과 일본인 직공간의 노동임금의 격차는 경악할 정도이었으니 1939년 현재에 직공 한사람의 일일급여는 일본남자가 2.77원인데 비해서 조선남자의 그것은 1.51원, 일본여자는 1.75원인데 비해서 조선여자는 0.77원으로

서 약 2배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는 인쇄 공장의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기계공의 그것이었다.<sup>6)</sup>

경성상공회의소가 조사한 보고서에 조선인 노동수탈의 잇점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① 조선인의 생필품값과 생활비는 아주 낮으므로 적은 임금으로도 동원이 가능하다.
- ② 위생관념이 낮아서 어려운 일이나 더러운 것을 취급하는 일에 적합하다.
- ③ 손재주가 있어서 특히 여공의 경우에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
- ④ 성격이 유순하고 언어습득이 빨라서 현장에 잘 적응한다.
- ⑤ 사상이 단순해서 규정업무에 적합하다.
- ⑥ 부화뇌동성이 있는 위에 단결력이 약해서 조직적 파업의 능력이 없다.

더구나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교활한 일본의 기업인들은 일본인 노동자의 파업에 분열을 조장하기 위하여 조선인 노동자를 이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sup>7)</sup>

체력조건으로 보면 중국인이 조선인 보다 강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이 구상한 「대동아공영권」의 노동분업은 기술·관리직은 일본인, 공장노무직은 조선인, 토목 및 잡직은 중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혹한 식민지경영도 우리의 근대화에 도움이 된 개발이었다면 죽지 않고 살아남았으니 일본제국주의의 은덕이라고 고마워해야 할 판이 아니던가?

#### 4. 공업성장의 내막

일제강점기 전기간을 통하여, 조선시대부터 방대하게 존립하여 오던 상업과 수공업이 점차 몰락하는 반면, 신식공장수와 종업원수, 그리고 공산물의 생산액은 놀랄정도로 성장하였다.

1920년 한반도내에 약 2,000여개의 공장이 있었으나 1930년에는 약 4200개, 1940년에는 7,100여개로 늘어났고 종업원수에 있어서도 1920년 약 5만 5천명이던 것이 1930년에 약 10만명, 1940년에는 29만 4천명에 이르렀다. 이 기간에 공산물 생산액은 1910년 7월 「경성도매물가지수」에 따라 데프레트 가격으로 환산할 때, 1920년의 그것은 약 7천만엔, 1930년은 약 1억 5천만엔, 1940년은 약 6억엔으로 증가했다. 1920년을 100으로 볼 때 1940년의 그것은 실로 846이란 경이로운 숫자가 된다. 특히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과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1930~40년 기간 공산품생산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20%를 상회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공장의 규모별로 따져볼 때 식민지공업의 파행성이 어떤 것인지 알수 있다. 1940년 현재 종업원 100인을 넘는 공장수는 총공장수의 불과 4.7%를 점하는데 대해서 이들이 생산하는 액수는 총생산의 69.0%를 점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일본 독점자본계열에 속하는 군수적 성격의 중화학공장이기 때문이다. 전체 공장수의 약 82%를 점하고 있는 종업원 30인 미만의 공장생산액은 총생산의 16.5%에 불과하며 조선인 공장의 대부분은 물론 이 범주에 속한다.

1930년대 중반 이후 한반도의 공업은 아직도 식품·방직공업의 비중이 무거운 비중이면서도 금속·기계·화학공업, 즉 이른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급속

도로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1930년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 화학공업의 생산액은 10배이상, 금속공업은 50배이상, 기계공업은 11배이상(경상가격 기준)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제국주의 관방학자들은 이 사실을 놓고 「조선의 산업혁명」이라고 운운한다. 그러나 성장의 내막을 자세히 보면 역시 식민지적 기형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첫째 화학공업의 경우에는 일본질소(日本窒素)계열의 분신이라 할 수 있는 조선질소(朝鮮窒素)계열의 전기화학 및 전기 금속공업의 독점과 이에 예속된 군소 어유비(魚油肥) 공업의 창궐 때문이고, 둘째로 금속공업의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채광되는 각종 금속을 제련하는 스미토모(住友) 금속과 닛테쓰(日鐵)계열의 제철공장의 입식 때문인데 이들 모두가 군수적 성격을 띠고 있을뿐 아니라 원소재를 1차 추출해서 일본내의 각종 공장에 공급하는 역할이 추가 되어 있다.

대공업의 진출은 민족별 자본구성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1940년말 현재 공장자본 100만엔 이상의 공장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인 자본은 전체 공장평균이 94%, 금속공업은 98%, 화학공업은 100%에 이르러 이른바 1930년대의 성장부문을 완전히 일본 독점기업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경제체제가 강화되고 원료, 동력, 노동력이 대규모 군수적 독점기업에 집중됨에 따라 민족자본의 지반이 취약한 조선인의 중소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진정한 공업화는 개발과급효과가 큰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상·하 연관관계가 잘 조직되어 움직일 때,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칠때를 말한다. 당시의 한반도와 같은 반봉건적 농업위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방대하게 확대되고 있었던 상업과 수공업이 매뉴적 생산단계를 거쳐서 근대공업으로 자생·발전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공업화·근대화라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1930년대 중화학공업의 정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우선 금속공업을 보면 1938년 현재 종업원 100인 이상의 공장이 10개소 가동되고 있었는데 팔목되는 입지로는 송림·청진·성진 등지의 제철소, 지남포·용암포·해주·청진·성진 등지의 제련소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가 한반도에 부존된 철광석에서 철강재를 추출하여 일본에 있는 관련공장에 공급하는 일, 그리고 한반도에 부존하는 금광이나 마그네사이트광을 금괴나 마그네슘으로 정련하여 역시 일본에 공급하는 일이 주업이었다. 이들 대규모 공장에서 추출되는 소재를 소비할 연관공장이 당시에 한반도에는 거의 없었던 것이다. 이들 대공장을 제외하면 금속공업의 부류에 포함되는 중소공장은 거의가 건축재생산, 주물생산 등이 주종을 이룬다.

금속공업의 빈약한 연관관계는 생산액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장수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은 사실에서 증명되는데, 1930년 현재 217개의 금속공장이 1934년에는 239개, 1938년에는 266개로 증가한데 불과했다. 이중에 조선인 공장은 1930년의 137개소에서 1938년의 150개소로 증가하여 일본인 공장보다 숫적으로는 많았으나 이들이 모두 유기, 철물, 가마솥, 농구, 합석제품을 가공하는 수준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기계공업은 어떠한가? 1940년판 공장명부에 종업원 100인을 넘는 기계·기구공장은 29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이중에 14개소가 서울과 인천 및 소사에 입지했고, 부산에 4개소, 평양에 3개소, 홍남에 2개소 등 대도시에서 편재하여 있었다. 이중에 부산의 선박, 영동포와 용산의 철도차량, 소사의 광산기계공장을 제외하면 거의가 차량수리, 방직기계수리, 건축용기계수리, 광산용기계수리 등을 위시해서 전구, 농구, 차체, 짐수레 생산이 주종을 이룬다. 식민지 기초공작에는 철

도차량의 수요가 급증했을 것이고, 지하자원 수탈에는 착암기를 비롯한 광산용기계가 크게 요구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계공업의 꽃이라 할 공작기계공업의 발달이 미약한 한편, 중간재나 부품생산이 조립공장과 연결되는 체계가 역시 미약했던 당시의 내막을 우리는 과연 공업화·근대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자는 조선인의 기계공장이 1930년 59개소에서 1938년 211개소로 늘어난 사실을 두고 「개발-성장론」 운운 하지만 이것은 생산·기술의 전후방 메카니즘을 모르는 탓에서 온 것이다.

해주·봉산·승호리·천내리에 입지했던 아사노(淺野)·오노다(小野田)계열의 시멘트공장도 한반도에 무진장히 매장된 석회석을 값싼 노동력으로 수탈하여 시멘트로 만든 다음 만주시장에 내다 판 것 이외에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었는가?

1930년대의 화학공업 성장은 더욱 파행적이다. 이 분야는 생산액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였지만 공장수에 있어서도 1930년 507개소 이던 것이 1938년 1532개소, 즉 3배나 증가했다. 이중에 조선인의 그것이 370개소에서 1199개소로 늘어났고 총공장수의 78%가 조선인 공장이었다. 민족별 생산액의 집계도 없어서 구별할 수 없으나 화학공업은 공장수에 있어서 조선인의 그것이 절대 우세한 반면에 자본구성이나 생산액 규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일본의 독점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선인의 화학공장수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1934년 이후의 「공장명부」를 보면 소규모 어유비(魚油肥)공장이 난립하고 있음을 볼 것이다. 특히 한반도 동해안에는 울산 연안에서부터 함경북도 북단의 웅기 및 서수라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영세규모의 정어리 공장이 분포하였는데 1930년에서 1938년 사이 1025개의 신규화학공장중에 조선인 경영의

정어리공장이 무려 829개소에 이르는 것을 보면 조선인 공장의 화학공업이란 곧 정어리공장을 가르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동해에서는 1929~30년과 1937~38년의 불어기(不魚期)를 제외하면 1940년까지 매년 엄청난 정어리 풍어를 맞고 있었다. 전쟁에 의해 각종 물자가 부족하던 일본은 이를 통해서 각종 유지공업의 원료를 조달하는 한편 유기질비료나 사료나 고기먹이로서 정어리 찌거기를 수집하여 갔다. 이때 정어리 기름은 전해수소(電解水素)로 처리하여 갱화유·지방산·중합유·도료·글리세린의 원료로 쓰일 뿐 아니라 폭약의 원료인 니트로글리세린을 만드는데 쓰이므로 생산되는 기름의 거의 전량이 조선유지, 일본질소, 협동유지, 조선간유, 조선도료, 부산유지 등 대기업이 헐값으로 수거해갔다. 특히, 노그찌(野口)의 일본질소 주식회사는 큐슈(九州)의 노베오카(延岡)에 화약공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자회사 격인 조선질소 주식회사 홍남공장에도 화약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조선인의 정어리공장은 오직 저들의 군수산업을 위한 원료수거자에 불과했다. 이것은 마치 조선인의 정미공장이 대일 쌀수출을 위한 원료제공자에 불과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은 정어리가 육양되는 바닷가에 한두개의 가마솥과 착유기를 시설하고 가동하는 그야말로 작업장이지 공장이라 이름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나마도 정어리 회유지가 탄 곳으로 이동한 1940년 이후에는 모두가 문을 닫게 되었다.

기름을 짜고 남는 찌꺼기(魚粕) 역시 전량을 일본의 독점기업이 수거하여 왔으니 미쯔비시상사, 미쯔이물산, 일본유지주식회사, 일본유기비료주식회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수거한 어비를 통해서 일본의 밭농사와 면화농사에 전량투입하면서 한반도의 면작에는 퇴비나 인분 투입을 강요하는 형편이었다. 어비의

수거를 조직화하기 위해서 「조선유비제조수산조합연합회」 산하에 「정어리유비제조수산조합」을 청진·합흥·주문진의 세 곳에 설치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조합의 지부를 함북에 3개소, 함남에 8개소, 강원도에 8개소를 두었다.<sup>8)</sup> 다른 한편으로 저들은 기존 어업조합을 통해서도 어유비를 수거했던 것이니 자유로운 공업의 개발이 아니라 오직 저들이 필요한 공업의 소재를 헐값으로 약탈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 5. 왜곡된 경성의 공업공간

1970년대 후반 이후 서울에서는 많은 공장이 서울의 교외 및 지방으로 분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결코 떠날 수 없이 남아있어야 살아 남는 공장들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영세규모의 인쇄·출판·의류공장들이다. 이들이 분포하는 곳은 인현동에서 총무로 4·5가에 이르는 중구와 남대문·동대문 중심의 인근지역이다. 이들은 대체로 제조업과 판매업을 겸하면서 주거지와 혼재하여 있거나 일반 가옥을 임대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상업·주택지구라 불리는 곳에 집중하여 있다.

일반적으로 인쇄출판업이나 의류산업은 대도시의 중심부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노동과 도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지만 서울의 경우에 왜, 언제부터 이곳 중구에 영세공장이 집중하여 떠나지 못하는 관성을 갖게 되었을까 숙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것을 식민지 경영의 유산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첫째는 일제의 도시경영정책과 공장분포의 영향, 둘째는 광복이후 이에 대한 반성없는 도시계획의 영향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공장명부를 통해서 보면 1911년 당시 경성시내에는 56개의 공장이 있었다. 이들의 입지는 주로, ① 종로의 시전행랑과

연관된 곳, ② 광교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곳에 드문드문 산재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이 1930년에는 650여개의 공장, 1940년에는 1200여개의 공장으로 증가하면서 그 입지도, ① 청계천에서 퇴계로 사이, ② 의주로-서울역-용산역을 잇는 철도변에 집중하고, ③ 국지적으로는 동대문 밖과 영등포 및 서대문 밖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크게 보면, 경성시내의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분포하고 있었다고 볼수 있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은 태조 이래의 한양 도시원형을 말살하면서 식민통치를 효율화하기 위한 「시구개정사업」에 돌입한다. 이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공장은 일본인 거주지 중심으로 분포하는데 이것이 곧 경성공업의 동서축과 남북축이다.

1912년에 시작되어 1929년까지 계속된 「시구개정사업」은 경성의 기존 도로를 확대·개수하고 남북 가로망을 청계천 이남으로 확대하여 격자상으로 정비한 계획사업으로서 이사업의 의미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이 사업을 통하여 토지를 강제수탈하는 기회가 되었고, 둘째는 치안을 효율화하는 목적에 기할 수 있었으며, 셋째는 조선조 이래의 도시원형을 훼손함으로써 상징성을 말살하려는 뜻이 있었고, 넷째는 경성의 중심을 종로축에서 황금정(을지로)축으로 옮길뿐 아니라 일인거주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목적도 있었다.<sup>9)</sup>

「시구개정사업」의 진전으로 공장의 분포가 청계천 이남의 일인거주지 중심으로 지향된 다른 한편으로 1913년에 공포된 총독부령 제11호 「시가지건축취체규칙」은 서울의 공장분포를 의주로-서울역-용산역을 잇는 철도연선으로 지향케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 「시가지건축취체규칙」은 오늘의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을 혼합한것과 흡사한 법령으로서 특히 동규칙 제6조에는 「약취·유독가스 또는 다량의 매연·분진을 발

하는 공장)을 위한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이 때 이 법령이 적용되는 지역은 경성부내 전역과 용산·한지면이 포함되었고, 제6조를 위한 지역을 ① 성벽밖의 철도선 이동을 제외한 곳, 즉 지금의 의주로·서울역·용산역 뒤쪽, ② 성벽내의 혜화동·동숭동·이화동·충신동·종로6가·을지로6·7가로 제한하였다.<sup>10)</sup>

서울역과 용산역 뒤쪽, 및 지금의 원효로 일대에 중화학공업이 많이 분포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규제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혜화동·동숭동·이화동·충신동 일대의 종로에는 충신동의 「조선제사」 공장을 제외하면 적어도 1930년 현재의 공장명부에는 이렇다할 공장이 많지 않다. 결국, 종로에는 공해공장의 건설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지가 기피되었고, 일본인 거주지역인 청계천 이남에는 공해공장의 입지를 금한 대신에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한 공장입지가 신속성있게 허용된 곳이다. 이것이 경성시내의 공업공간을 하나는 종로·을지로 방향의 동서축으로, 다른 하나는 경성-용산-노량진-영등포로 잇는 남북축으로 만든 계기가 된 연유이다. 청계천에서 퇴계로에 이르는 수많은 일본인 공장은 광복이후 귀속재산으로 불려져서 오랜동안 도시환경 악화의 주범 역할을 하다가 지방분산되고, 지금은 그 온상을 벌여 수많은 출판·인쇄업과 의류업이 창업·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토지이용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용도지역제가 본격적으로 법제화된 것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고 이에 따라서 1939년 총독부 고시 제756호는 경성시가지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미지정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때 공업지역은 경성부 시가지면적 약 135km<sup>2</sup>의 4.9%, 미지정지역은 22.7%를 점하였다. 공업지역으로는 용산역부근과 영등포일대, 청량리역 뒷편에서 행당동에 이르는 지역, 경춘·중앙선

이 통과하는 이문동일대가 이에 해당하고 광범위한 미지정지구는 대체로 이들 공업지역 주변에 설정되어 있었다. 미지정지역은 유보적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건축규제상 혼합지역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일제가 지정한 용도지역은 광복이후에 그대로 존속되다가 1952년에 비로소 내무부 고시로 우리의 지역제가 공포·시행되었는데 그 내용은 일제의 그것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되 「미지정지역」은 그대로 「혼합지역」으로 명명하고 여기에 「녹지역」을 약간 추가한 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일제가 법제화한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그 후신인 1952년의 내무부고시 제756호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한 1962년의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나올 때 까지 무려 28년을 그대로 유효한 셈이다. 그런데 1962년의 도시계획법과 1964년 건설부 고시로 발표된 용도지역에도 「혼합지역」을 「준공업지구」로 명칭만 바꾸고 중앙천변을 광범위하게 준공업지구로 제정한 것 이외는 역시 일제의 유산을 크게 벗지 못하였다. 그동안에 서울의 인구집중과 거주 확대는 급속으로 진행되었고, 성장위주의 경제개발정책과 선거인심에 보호를 받은 서울의 공업은 분산정책이 강화될 때까지 기존 공업지와 준공업지를 중심으로 서울의 모습을 일그러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일그러진 모습은 비단 공장의 분포와 입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일제가 남긴 서울의 공업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니 광복이후 한동안 방직·식품공업 편중의 기형성이 바로 그것이다.

### 맺음말

일본의 전 총무청 장관 에토(江藤)는 연전에, 일제가 한반도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망언을 한 바 있고 요 몇년 전에도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조약에 의한 정

당한 행위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일개 민간신분으로 뻔어낸 망언을 탓할까만은 일본의 많은 지식인들이 이러한 그릇된 사고를 밑바닥에 깔고 있음이 문제요, 더구나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학자들이 최근에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에 문제의 심각성은 있다.

한반도내 경제활동의 동서 격차, 서울과 지방의 격차, 그리고 광복직후 남북의 격차가 본질적으로 일체의 한반도에 대한 수탈 일변도의 경영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륙침략의 기지구축 때문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저들은 일본노동자의 절반값으로 조선사람을 혹사시키면서 한반도에 부존된 각종 자원을 1차 조제하여 일본으로 또는 만주로 실어갔기에 한반도내에서는 연관산업의 조직이 마련될 수 없었다. 연관산업의 조직이 없으면 공간조직도 파행적으로 존립하기 쉽다. 그리고 이러한 파행적 공간조직을 우리는 흔히 문제지역이니 낙후지역이니 침체지역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곳에는 연관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기간산업의 투입으로 개발을 촉진하지만 파행적 공간조직의 선행시대성(先行時代性) 내지는 관성은 여간해서 시정되지 않는다. 광복이후 우리가 경험한 서울의 과집중 및 호남의 상대적 후진성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공간조직의 파행성은 거대도시 서울 공업에도 잘 들어나고 있다. 서울시내에 입지한 수많은 무허가 영세공장의 정체는 그것이 적어도 식민통치자들이 통치편의 위주로 제정한 「시구개정사업」, 「시가지건축취체규칙」,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지역적 범위에서 창업·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곳에 존립하는것들이다. 「시구개정사업」은 청계천과 퇴계로 사이의 일인거주지를 오늘날까지 영세적 도시형공장의 온상으로 만드는데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서울의 공업분포를 동서축과 남북축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였다.

「시가지건축취체규칙」과 「조선시가지계획령」은 광복이후 적어도 1960년대 까지 서울의 토지이용을 규제한 법으로서 이를 근거로 설정한 「공업지역」과 「미지정지역」은 적어도 서울시의 공장분산정책이 강화된 70년대말 이전까지 주공혼합의 무질서한 곳으로 존속하여 왔다. 왜냐하면, 광복이후 1960년대까지는 서울의 지역제가 일체의 그것을 비판없이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요, 이른바 「미지정지역」은 이름만 「혼합지역」 →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었지 설정된 지역범위와 내용이 애당초부터 일체때의 그것과 큰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는 공장수나 생산액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한 때이다. 그러나 이때의 성장은 군수와 관련된 대규모 중화학 독점자본의 입식에 기인한 것으로 조선의 영세공장들은 이들과 유기적 연관관계가 극히 미약했다. 조선인의 공장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그것이 대체로 독점기업에 원료를 추출·제공하는 역할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이것이야말로 공업의 건설이 아니라 조원료를 다듬는 작업장의 건설에 불과했던 것이다. 광복이후 식품이나 섬유공업은 이내 재건이 가능했으나 중화학부문은 재건에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재건할 아무런 내용도 없었다. 이것 또한 광복이후 우리의 공업입국을 어렵게한 요인의 하나였다고 사료된다.

일체의 공업이 광복직후 우리의 공업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깊숙히 파악하기 위해서 광복전후의 공업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크게 요망된다. 특히, 일제를 경험한 세대는 점차 사라지는 반면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에또」의 발언과 같은 식민지 미화론에 현혹될 젊은이가 생겨날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註

- 1) 시사저널, 349호, 1996년 6월 26일자, 한겨레신문 1996년 11월 12일자.
- 2)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41년판 및 조선은행 「조선경제연보」1948년판.
- 3) 金哲, 1965, 韓國の人口と經濟, 岩波書店 p. 174
- 4) 형기주, 1976, "한국공업입지 전개과정"Ⅱ, 지리학 제14호, 대한지리학회, pp. 27~31 식은조사월보, 1938년 11월호 pp. 29~30
- 5) 姬野實, 1940, 朝鮮經濟圖表, 조선통계협회, pp. 256~260
- 6) 京城商工會議所, 1942, 京城における工場調査, pp. 95~97
- 7) 京城商工會議所, 1924, 조선경제잡지, 제100호, pp. 47~54
- 8) 古田悅造, 1986, 近世魚肥流通の地域的展開, 古今書院, pp. 377~388
- 9) 손정목, 1994,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일지사, pp. 98~100
- 10) 상계서, pp. 106~110